

2026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19세기 민중운동과 정치문화
-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이해의 너머 -

일 시 2026. 6. 11.(목) 14:00

장 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갑오마당

주 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 14:00	접수 및 등록
14:00~14:10	[개회식] 인사말씀 -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사회: 김미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14:10~14:40	[저자발표] 『19세기 민중운동과 정치문화-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이해의 너머-』 - 배항섭(전 성균관대 교수)
14:40~15:40	[지정토론] - 왕현종(연세대 교수) - 김창수(전남대 교수) - 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5:40~16:00	휴식
16:00~17:30	[자유토론] -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 및 참가자 자유토론 좌장: 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 소장)
17:30	폐회

목차

[주제 발표]

19세기 민중운동과 정치문화 -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이해의 너머 | 배항섭 ————— 5

[지정토론]

민중운동의 정치문화와 민중적 자율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 왕현중 ————— 21

서구적 도식을 넘어 한국의 문법으로 19세기 민중운동 읽기 | 김창수 ————— 32

‘비근대’와 ‘민중’을 생각하며 | 남기현 ————— 36

19세기 민중운동과 정치문화

-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이해의 너머 -

배 항 섭

1. 문제 제기: 역사연구의 현재성과 19세기 민중운동 연구

이 책은 19세기 조선의 민중운동에 대한 경험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민중운동사 연구를 비롯한 한국(근대)사 연구를 사실상 지배해온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역사인식을 넘어서는 대안적 역사 이해의 가능성을 추구해본 것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① 기왕의 역사연구를 지배했던 역사인식, 곧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② 19세기 민중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역사인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상 구성.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19세기 민중운동 연구가 서구·근대중심주의에 입각해 있던 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서구중심주의/근대중심주의), 둘째, 이 책의 키워드인 ‘정치문화’와 ‘민중의식’에 대한 설명, 셋째, 이 책의 주요 내용 및 함의에 대한 설명 등이다.

2. 19세기 민중운동 연구와 서구중심주의·근대중심주의

1) 기왕의 민중운동사 연구(변혁주체론 중심)와 역사인식

19세기 민중운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1980~1990년대 중반이었다. 그 배경에는 군사독재와 고도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대외적 종속이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변혁주체로 ‘민중’이 호명되었고, 변혁주체의 역사적 뿌리를 찾으려는 민중운동사 연구가 활발해졌다. 민중운동 연구자들 자신이 스스로를 민중으로 인식하고 연구 행위를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했던 이 시기의 학문적 분위기는, 동학농민전쟁이나 임술민란 같은 19세기 민중운동을 ‘반봉건·반외세’ 운동의 선구로 이해하는 시각을 낳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민중운동 연구에 대한 관심은 크게 퇴조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 침체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민중운동 연구가 가지는 현재성을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걸맞게 재정립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변혁주체론적 민중운동 연구는 그 이후 제기된 다양한 비판들을 수용하여 새로운 방법이나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들이 일부 제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기왕의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민중운동사 연구를 넘어서는 대안적 접근방법이나 이해는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민중운동사 연구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조차 충분히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19세기 민중운동사 연구가 근거해온 서구중심주의, 그리고 근대

를 특권화하고 전근대를 식민화하는 역사인식인 근대중심주의를 넘어서서 19세기 민중운동을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기후위기·생태환경 문제 등 발전의 끝에 있는 근대·현대가 마주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과 더욱 암울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는 발전론, 그리고 발전론에 의거하여 구축된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엄중히 요청한다. 이러한 현재적 문제의식이 곧 새로운 역사인식을 모색해야 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2)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Eurocentrism)란 한국사도 서구적 문명화나 근대화를 마땅히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단선적 발전론, 목적론적 역사인식이다. 이 인식 아래에서 ‘비서구’나 ‘전근대’에 존재했던 무수한 경험이나 사유들은 모두 ‘서구’가 걸어간 역사적 경로, 혹은 ‘서구’가 먼저 구축해놓은 ‘근대’를 향해 ‘발전’해 나가야 할 ‘야만’ 내지 미숙하거나 불완전한 것들로 규정된다. ‘비서구’나 ‘전근대’의 경험이나 사유로부터 서구와 근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리처드 드레이튼(Richard Drayton) 등이 지적하였듯이, 비서구인들의 인식까지 지배해버려서 비서구의 모든 역사적 현상을 유럽의 기준에 의해 이해하는 서구중심적, 발전론적 역사관, 서구의 경험을 준거로 한 ‘보편적’ 역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성에 입각한 새로운 역사인식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내부로부터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과 이해가 요청된다.

<근대중심주의>

근대중심주의(modernocentrism)는 그 동안 한국학계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세계학계에서도 매우 제한된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된 바 있지만, 개념 규정이 느슨하거나 정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내린 규정을 차용하여 근대중심주의는 “전근대를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근대의 방식”이며, “전근대에 관한 지식체계로서의 근대중심주의는 근대인의 의식 속에 전근대를 여과하여 주입하기 위한 필터” 정도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대중심주의가 가진 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더 분명히 드러내자면, “근대에 의한 전근대의 식민화”, “전근대(의 시간)에 대한 근대(라는 시간)의 특권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대중심주의가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사적 시간관에 있다. 근대중심주의가 규정해놓은 시간관에 따르면 근대와 중세 혹은 고대라는 시간은 서로 엄격히 구별되는 시간들인 동시에, 각 시대들은 서구의 근대가 구성해놓은 것처럼 하나의 통일되고 균질적인 요소/시간들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초래한다. 그러나 최근 ‘중세 속의 근대성’, ‘근대 속의 중세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보이듯이 ‘중세’나 ‘근대’ 등으로 규정되는 역사적 시간의 실상은 다양한 ‘중세적인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 ‘근대적인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병존·공존하며 다양한 시간들은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역사 과정을 만들어 간다. 근대중심주의가 구성해 놓은 시간관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시간들이 보여주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양성이나 복잡성으로부터 근대중심적 시간관을 벗어나고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한다.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좀 더 쉽게 이해해보자면 전자는 공간적 타자화-서구 대 비서구-의 구도를 만들고, 후자는 시간적 타자화-근대 대 전근대-의 구도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역사학은 이러한 두 갈래의 타자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역사인식에 지배적인 규정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발전의 이면에서 초래된 기후생태위기, 근대가 추구한 가치와 반대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의 확대, 폭력과 억압 등등은 근대 역사학에 대해서도 심각한 회의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민중운동 연구의 서구중심주의 비판 (1): “지주제=봉건제”라는 인식의 오류

19세기 민중운동의 성격을 ‘반봉건’으로 이해한 것은 서구중심적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조선사회를 서구 중세와 같은 봉건사회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식민사학의 ‘봉건사회 결여론’을 극복하고 한국의 역사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고대노예제-중세봉건제로 이어지는 역사 도정을 걸어왔음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지주-작인 관계를 조선사회의 기본 생산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서구의 영주-농노 관계와 동일한 생산관계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지주-작인 관계는 영주-농노 관계와 달리 반드시 신분적 지배-예속관계가 겹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작인의 신분이 지주의 신분과 동일하거나 높은 경우도 존재했고, 이러한 경향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강화되었다. 조선의 지주제에서 지주-작인 관계는 작인에 대한 토지 긴박이나 인신적 예속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신분과 관계없는 계약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19세기 민중운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던 이른바 ‘두 가지 길 이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농업에서 근대적 개혁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 이론의 근저에는 토지소유권의 중층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중층적 소유구조가 배타적 소유구조로 전환되는 방법의 차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럽 봉건사회의 중층적 토지소유구조, 즉 영주의 상급소유권(명목적 소유권)과 농노의 하급소유권(경작권, 실질적 소유권) 가운데 어느 쪽이 배타적 소유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위로부터의 길’과 ‘아래로부터의 길’로 구별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근대적 정치·경제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이미 사실상의 배타적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두 가지 길 이론’을 조선에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이 이론을 지주제 철폐 여부를 기준으로 변형 적용하여, 1862년 임술민란이 지주제를 부정하는 토지개혁의 구호를 정면으로 내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봉건운동으로는 아직 본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주제에 온전히 반대하지 못한 점을 ‘한계’ 내지 ‘불구’적인 것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럽 봉건사회의 토지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이론을 그와 전혀 다른 토지소유구조가 형성되어 있던 조선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였다.

나아가 이러한 서구중심적 접근은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 서구의 경험을 따라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역사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채택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억압·외면되거나, 나아가 왜곡되기도 하며, 서구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사라져야 할 것들로 폄하된다. 설사 서구의 경험과 유사한 것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단지 서구가 경험한 것들의 아류(亞流) -길게는 수백년 뒤쳐져서 경험한-에 불과하게 된다. 동학농민전쟁을 독일농민전쟁이나 프랑스혁명의 아류 정도로 이해하면서 자랑스러워하거나 ‘세계 몇 대 혁명’이라는 표현으로 만족해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가진 개성적 측면을 몰각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경험들은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사

실상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4) 민중운동 연구의 서구중심주의 비판 (2):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외면

서구중심주의가 초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조선사회가 분권적이었던 유럽 봉건사회와 달리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였다는 점을 사실상 간과한 것이다. 조선왕조는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아래 밀도 있는 관료제를 운영하며 지방 곳곳까지 지방관을 파견하여 백성과 토지를 지배했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국왕·조정과 백성 사이에는 간단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법과 제도나 질서를 포함한 다양한 역사적 경험은 분권적이었던 유럽의 경험에 입각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민중운동 혹은 민중과 국가권력과의 관계는 물론 ‘근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민중운동에 대한 이해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의 ‘근대이행’에서 정치적 면에서 분권적 정치체제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은 토지소유권의 배타성 확보 등 경제적 측면의 전환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국면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그 과정에 반발하는 농민이나 지방 귀족 등 다양한 계층이나 세력으로부터 저항을 받았으며,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이 점에서 중앙집권적 체제가 갖추어져 있던 조선의 경우 분권적 체제가 중앙집권적 체제로 전환되었던 유럽과 사정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렉산더 우드사이드(Alexander Woodside)는 『잃어버린 근대성들』에서 중국·한국·베트남의 경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지탱하는 관료제 경험이 길게는 천여 년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그 과정에서 관료제라는 ‘근대성’을 일찍부터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 운영의 노하우는 물론 관료제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까지 넘칠 정도로 축적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를 수용하면서 그동안 경험하고 축적해온 관료제를 둘러싼 ‘근대성’과 관련한 논의들은 모두 묻혀버렸다고 하였다.

시드니 태로우(Sidney Tarrow)나 찰스 킬리(Charles Tilly) 같은 사회운동 이론가들에 따르면 유럽에서 중앙집권화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민중운동이나 집합행동이 단순한 ‘반작용적(reactive)’으로 저항했지만, 이후 중앙집권적 국민국가와 시장 자본주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자 사전 대비적으로(proactively) 국가와 교섭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이러한 변화가 근대 사회운동과 민주정치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이들은 중국을 비롯한 비서구 후발국들의 저항운동의 역사적 ‘발전’도 유럽의 경험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흥호평(Hung Ho-fung)에 따르면 1740년부터 1839년에 이르는 중국 저항운동의 형태나 내용은 서구 사회과학자들이 말하는 단선적 발전 과정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저항운동은 초기 근대 중국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경제의 순환적 변화와 궤적을 같이하는 독자적 경로를 밟았다. 빈 웡(R. Bin Wong)도 ‘중세 말기’ 중국과 유럽의 조세저항을 비교하면서, 중앙집권화 과정에 있던 유럽에서는 조세저항이 새로운 정치체제나 기구 발전으로 연결되었지만 이미 중앙집권화된 중국에서는 그렇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상의 연구 사례들은 조선은 물론 분권적인 유럽과 달리 중앙집권적 체제가 일찍부터 형성되어 있던 비서구의 근대전환기나 민중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체제라는 특성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요청됨을 보여준다.

3. 민중운동 연구의 근대중심주의 비판

19세기 민중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가 발 딛고 있던 또 다른 중요한 역사인식은 근대중심주의이다. 근대중심주의의 시간관에 따르면 전근대의 시간들은 근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운명을 지닌, 근대에 종속되고 식민화된 시간들일 뿐이다. 이 점에서 목적론적이기도 하다. 조선사회는 봉건사회였고, 봉건성의 핵심은 지주제에 있었기 때문에 민중운동 역시 지주제를 해체함으로써 ‘근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이해가 선형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해는 근대를 추구하는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민중 역시 부르주아와 마찬가지로 근대를 추구하고 또 추구해야 하는 규범적 존재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서구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근대중심적’이다.

비서구나 전근대의 경험들은 서구가 먼저 걸어간 근대를 향해 ‘발전’해 나가야 할 미숙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비하되며, 비서구나 전근대의 경험으로부터 근대와 서구를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봉쇄된다. 서구중심주의 뿐만 아니라 근대중심주의에 입각할 때도 한국사의 독자적 경험 내지 개성은 발언할 자격을 박탈당한다. 비서구 모두가 마찬가지로이다. 전근대를 근대중심주의에 포획된 시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전근대로부터 혹은 전근대에 의해 근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작업이다.

19세기 민중운동이 근대를 지향했다는 데 대한 비판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조경달은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민중의 지향이 ‘근대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반근대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학계에도 수용되어, 정창렬 등은 농민군이 “반봉건주의·반자본주의·반식민주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근대화”를 지향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는 ‘반근대론’·‘반자본주의론’이 부르주아운동과 변별되는 민중운동의 자율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반봉건주의·반자본주의·반식민주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근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둘째, 동학농민군이 ‘반자본주의’를 추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농민군의 요구조건이나 투쟁양상 분석 등 동학농민전쟁 내부로부터 접근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도출하고 있어 토대반영론적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는, ‘반근대지향론’ 역시 프랑크혁명 당시의 농민운동이나 일본 근대이행기 민중운동 연구성과에 의거하여 농민전쟁을 이해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내재적 분석에 의한 귀납적 접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준거로 제기되는 서구중심적 역사인식의 자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조경달은 동학농민군이 ‘반근대성’을 지향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동학농민군의 ‘평균분작’ 구상이다. 그는 이에 대해 농민군이 ‘농민적 토지소유’를 요구한 반근대적 지향으로 이해하였고, 그 배경으로 “본원적 축적과정을 수반하는 근대가 농민들에게는 다른 한편 비참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농민적 토지소유’ 개념은 토지소유의 중층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이미 조선후기부터 사실상 배타적, 근대적 소유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시장친화적’ 매매관습이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더구나 개항 이후에도 토지소유와 관련하여 조선후기와 다른 새로운 자본주의적인 법이나 제도라고 특기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1894년 당시에

는 아직 ‘근대가 농민들에게 비참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만한 본원적 축적과정’도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토지제도 관련 요구나 구상은 근대적·자본주의적 제도와 법에 따라 전통적·관습적 권리를 상실하게 된 일본이나 프랑스 민중이 ‘반근대적’ 지향을 보였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동학농민군의 토지관련 요구나 구상은 근대지향, 혹은 반근대지향 어느 한쪽으로 특정하기 어려웠고, 굳이 표현한다면 ‘비근대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였다.

한편 동학농민군이 자본주의 근대가 아니라 반자본주의나 비근대를 지향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근대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어렵고, 비판적 역사학으로서의 설득력 있는 현재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까지 19세기 민중운동이(사실은 한국사/세계사 인식의 본류가 모두 그러하다) 근거하고 있는 역사인식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극복에 있다. 근대중심주의는 역사적 시간이 근대를 향해 발전해나간다는 단선적 발전론에 입각하고 있다. 때문에 전근대의 제도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 등에 대해서도 단지 “근대중심주의가 구성해 놓은 ‘근대’”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기준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따라서 전근대의 경험 속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근대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애초에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톰바(Massimiliano Tomba)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적 근대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하며, 수많은 가능한 길 가운데 선택된 길일 뿐이다. 단선적인 역사철학, 사유재산의 우월한 효율성, 강력한 경제적 및 경제 외적 폭력 덕분에 이 궤적이 스스로를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것으로 주장해 왔을 따름이다. 두셀(Enrique Dussel)은 근대와 식민지적 계몽 과정에 의해 배제된 문화들이야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문화를 창조해나갈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파르타 차테르지(Partha Chatterjee)는 ‘현근대/전통’이라는 이분법이 전통을 탈역사화하고 본질화하는 함정을 초래하며, 전통 쪽으로 내몰리는 영역이 근대적 시민사회 원칙들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대와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되는 불평등,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파괴, 민주주의의 위기는¹⁾ 서구가 구축해놓은 근대가 더 이상 추종과 발전의 목표만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고 현재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역사연구에서도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인식에 의해 배제되거나 왜곡되어 온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다른 가능성-근대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단서들-을 재발견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의 ‘발전’ 과정과 그에 따른 ‘역사적’ 과제를 선형적으로 전제하고, 민중운동과 민중의 생각과 행동을 거기에 비추어 판단하는 방식의 접근, 곧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 목적론적 인식을 벗어나 역사과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이해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이 책에서는 ‘역사적 시간을 넘나드는(transhistorical)’ 혹은 ‘트랜스템포럴(transtemporal)한’ 시각을 제안했다. 서구중심적·단선적 발전론과 결합된 자국중심적·일국사적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transnational)’ 접근이 필요하듯이, 근대중심적 인식을 넘어서는 데는 역사적 시간을 넘나드는 접근, 전근대와 근대를 교차하거나 서로 연결하여 이해하

1) 20세기 후반 들어 서구의 역사적 경험이나 그들의 ‘근대’가 더 이상 추종의 대상만이 아님은 더욱 자명해지고 있다. 근대가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자, 근대인들에 의해 “압도적 믿음” 가운데 하나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조차도 이제는 새롭게 질문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국가 내부에서든 글로벌한 차원에서든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근대’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그 너머에 대한 상상과 고민을 요청하는 중요한 현실이라 생각된다.

는 접근이 유효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4. 민중과 민중의식: 다양성·다성성·복합성의 너머

기왕의 민중운동 연구, 특히 변혁주체론은 민중을 뚜렷한 계급·계층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학적 실체로, 민중의식을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근대기획의 주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서구중심적, 근대중심적, 발전론적 역사인식에 의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이나 목소리를 억압하고 외면한다는 점 등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대두되었다.²⁾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이해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직 서구중심주의는 물론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본격적 비판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민중 개념에 대한 재인식, 민중 내부의 다양성, 다성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앞서 언급했듯이 동학농민전쟁이 근대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는 논의들도 대두되었다.

예컨대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의 “새로운 민중사”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민중은 특정한 계급·계층으로 구성되어 분명한 외연과 내포를 갖는 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권력의 배치와 작용 속에서 파생되는 존재이자, 특정한 국면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구성·재편되는 유동적 구성물”로 규정하였다. 또 민중은 이질적인 정체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균열과 갈등 그리고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공동작용’에 의해 저항의 흐름을 형성하는 잠재력과 능동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또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도 말했듯이 피지배집단의 정치적 삶 대부분은 권력자에 대한 공공연한 집단적 저항에 있지도 않고 완전한 헤게모니적 순응에 있지도 않고, 이 양극단 사이의 광대한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 이 광범위한 영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의식도 어느 일방으로 규정하기에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일 수밖에 없었다. 민중은 저항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체제나 권력, 억압하는 쪽에 가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성·다성성·복합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제한적이다.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양성, 복합성 등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이다. 매우 다양한 문제의식과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라는 맥락에서 민중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묻혀버렸거나, 외면되고 왜곡된 다양한 요소들의 성격과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앞서서도 강조했듯이 민중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의식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근대이든 근대이든 집합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마찬가지였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특히 ‘민중’이 가진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편으로는 민중의 생각이나 행동이 가지는 의미나 성격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민중이 지배체제나 이데올로기에 전일적·일방적으로 회수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거기에는 무언가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전근대나 근대로 수렴되지 않거나 근대와 전근대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너머의 질서와 관련된 가능성이 잠복되어 있을 수 있다.

2) 변혁주체론이 발 딛고 있던 목적론적 발전론, 근대중심주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과도 공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9세기 민중운동의 지향을 ‘근대’ 혹은 ‘반근대’라는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선형적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국가·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지배 이념이나 정치체제, 관습이나 사회적 환경에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근대적인 것’과 친화적인 것도 있고, 매우 이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지배 이념이나 정치체제, 관습이나 사회적 환경과 무관할 수 없는 민중의 생각이나 행동 역시 ‘근대’ 혹은 ‘반근대’ 양자 어느 일방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복합적 다층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해 둔다. 문제는 민중의식의 자율성 내지 독자성, 민중의 삶과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들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일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 현재성의 바탕을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이해를 넘어서는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19세기 민중운동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과 의미를 재발견하는 데서 찾고자 한다.

5. 민중운동과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민중운동과 민중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서구중심적, 근대중심적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도 특히 사회경제적 모순의 분석을 통해 계급 혹은 계층 간 대립 구도를 확인하고, 그 모순의 대립 관계가 곧 계급의식 내지 민중의식으로 연결된다고 이해하는 ‘경제결정론’ 내지 ‘토대반영론’적 접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사회를 ‘봉건체제’로, 그 핵심을 이루는 생산관계를 지주-작인 관계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지주-작인 관계에 대한 인식, 곧 지주제 철폐 여하나 정도를 중심에 두고 민중의식과 지향을 도출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민중운동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진전된 고민을 봉쇄한다. 민중운동의 원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 모순이 지주제에 있고 민중운동이 지주제에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전제하지만, 현실적으로 민란의 요구조건에는 지주제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민중의식이나 지향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한계’ 등으로 규정할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의 ‘발전’ 과정과 그에 따른 ‘역사적’ 과제를 선형적으로 전제하고, 민중운동과 민중의 생각과 행동을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의 접근, 곧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 목적론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 큰 문제는 그 동안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으로 알려져 온 접근에서는 지주제 반대가 왜 제기되지 않았는지를 조선사회의 내부로부터 파악해가는 진전된 고민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재적 접근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구중심주의에 근거를 둔 토대반영론에 의한 이해는 선형적·기계적 접근일 뿐만 아니라, 민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요구조건, 민중의식 등에 대한 내재적 접근, 그를 통해 성격과 의미를 좀 더 복합적으로 이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 왔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1980년대 후반 케이스 베이커(Keith Michael Baker)가 프랑스혁명 연구에서 제시하면서 역사학 분야에서 수용되었고, 이후 톰슨(E. P. Thompson) 등이 민중문화나 모럴 이코노미(moral economy)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베이커에 따르면 ‘정치문화’는 “특정한 공동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활동과 그 성격을 규정하는 정치적 담론과 실천에서 보이는 경향”을 말하며, 서로 제기하는 요구들의 내용, 그것을 공식화하는 제도적 절차, 압박하는 전략들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요구들에 대한 해결, 경쟁하는 주장들에 대한 권위 있는 조정, 구속력 있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절차와 행위의 성격과 권한을 구성한다. 이러

한 정치문화는 역사의 창조물이며, 새로운 요구가 연관되고 낡은 요구들이 변형되면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톰슨은 민중운동에 대한 조건반사적이거나 경제환원론적 설명에 반대하면서, 18세기 영국의 거의 모든 군중행동에는 정당성(legitimation)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들은 전통적인 권리나 관습을 방어한다는 신념으로 충만해 있었으며, 이것은 공동체 차원의 합의(consensus)에 의해 지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관습은 생활과 노동의 물질적·사회적 실재에서 기원하며 사람들이 행동하는 맥락을 제공하고, 관습 공유자들의 지역 내에서 집단적 행동, 집단적 이해관계, 감정의 집단적 표현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홉스봄(Eric Hobsbawm) 역시 집단적 요소를 빼놓고 전통적 농민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민중의 공동체 혹은 ‘작은 세계’는 집단성을 가지며 이것은 노동과정 혹은 공동의 사용을 위한 자원의 통제과정에서 협동이 요구되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세계사의 경험에 따르면 중세 말에 일어난 급진적 민중운동에서도 민중들은 대체로 지배이념을 전유(appropriation)하는 방식으로, 즉 지배층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자신들의 불만을 요구하거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세 유럽의 농민운동을 연구한 프리드만(Freedman)에 따르면 농민운동은 새로운 정치적·도덕적 용어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노동의 존엄함”이나 “시골뜨기들이 신에게 더 가깝다.”는 등 이미 존재하던 ‘상식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독일농민전쟁에서도 농민들은 불만을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면서 “오직 신만이 정당하게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신적 지배에 저항하였다.³⁾

이는 19세기 민중운동에서 보이는 민중의 이상이나 현실인식 역시 당시 사회의 지배체제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며, 민중운동이나 민중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습이나 전통적 법과 제도에 대한 고려가 불가결함을 시사한다.

정치문화 개념을 활용한 접근의 핵심은 대립되는 계급이나 계층을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일방이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 양자 모두의 정치적 생각과 행동을 규정하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되며, 양자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했던 가치관이나 규범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민중운동이 어떤 논리에 의해 발발하고 전개되어 갔는지, 반대로 지배층은 이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지배논리를 확립해나갔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치문화를 고정적·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형성물로 파악하기 때문에, 민중의식을 사회경제적·정치적 질서의 변화에 연동된 다이나믹스(dynamics, 동역학)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 점에서 ‘정치문화’는 그람시가 말하는 ‘상식(good sense)’과도 닿아있는 개념이다.

6. 조선의 ‘정치문화’와 민중운동 이해

‘정치문화’ 개념은 한국의 민중운동이나 민중의식을 이해하는 데 더욱 유용할 수 있다. 조선의 경우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그리고 그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마련된 지배이

3) 이러한 주장은 최근의 독일농민전쟁 연구에서도 보인다. 독일농민전쟁 당시 농민군 측은 통치자들로부터 “반역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복음의 확립”, “정의의 올바른 집행”, “부담의 경감” 같은 상호 연관된 유연한 용어망을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적 성격의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Gerd Schwerhoff, “Reflections : Beyond the Heroic Narrative: Towards the Quincentenary of the German Peasants’ War, 1525”, German History 41:1(2023).

념으로서의 민본(民本) 이념과 이를 실천하는 정치이념으로서의 인정(仁政) 이념은 백성들의 일상 생활과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국왕의 신하(王民)로서 국왕의 토지(王土)를 밭 갈아 먹고 살기 때문에 국왕에게 세금(王稅)을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본과 인정이라는 지배이념 역시 조선후기에 들어 중앙 정부에 의한 소원제도의 운용, 향촌질서의 변화, 교육경험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점차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고 내면화되어 갔다.

또한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지배이념을 습득하여 관료들과 공유하고 있었던 재지 사족들이 평천민층과 같은 마을 혹은 이웃마을에서 생활하였다. 이는 엘리트층과 평민층의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던 유럽 중세나 일본 에도시대, 명말 이후의 중국과 비교할 때 사족과 평천민층 간의 문화가 상호 침투하기에 용이한 조건이었으며, 사족층에 의한 지배이념의 확산과 그에 기반한 정치문화의 형성에도 유리하였다. 이에 따라 엘리트인 사족층과 평천민층 문화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희석되어 갔다. 따라서 민중운동이나 민중의식을 이해하는 데도 지배이념이나 체제를 토대로 형성되고 변화해나가는 '정치문화' 개념을 활용한 접근이 특히 유용하다.

7. 이 책의 구성

이 책이 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조선의 정치·경제체제와 이념 등의 면에서 유럽과 매우 달랐던 조선사회의 개성을 내부로부터 파악하는 것, 그리고 조선사회의 지배이념이나 지배체제, 법적·제도적 장치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형성되고 변화해나간 '정치문화' 개념을 활용하여 19세기 민중운동과 그들의 지향이 가지는 성격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정치문화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고자 한 민중이 아래로부터 만들어간 새로운 논의구조나 질서와 그 속에 내포된 가능성을 트랜스히스토리컬(transhistorical) 내지 트랜스템포럴(transtemporal)한 시각이라는 맥락에서 모색하는 것이다.

전반부 1~4장에서는 조선왕조의 지배이념과 그것이 민중에게 확산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정치문화의 형성과 변화를 다루었다. 제1장에서는 민본과 인정 이념의 내용과 의미, 정치문화 형성의 기초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신문고·격쟁·상언 등 직소(直訴)제도를 통해 국가권력과 민중의 관계 속에서 정치문화가 형성·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평민서당의 확산과 지배이념의 민중적 내면화 과정을, 제4장에서는 향촌질서의 변화와 그 속에서 사족-평천민 간의 관계가 조정되면서 정치문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후반부 5~9장에서는 이 정치문화를 기반으로 아래로부터 만들어간 새로운 공론·질서·체제 구상과 그 가능성을 근대중심주의나 서구중심주의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18·19세기 부세제도의 변화(총액제·공동납)에 대한 향촌사회의 대응 과정에서 사족 중심의 '향중 공론'과 다른 '민중공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19세기 민란의 정치문화-인정 원망(仁政願望)과 왕민의식(王民意識)-와 그 속에서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의식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의 정치문화와 새로운 체제 구상을, 제8장에서는 조선후기의 정치·경제체제 및 민중운동의 체제구상을 트랜스히스토리컬한 시각에서 재조명하였으며, 제9장에서는 아래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체제의 가능성이 '근대 지향'의 엘리트 개혁에 의해 억압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8. 각 장의 주요 내용

1~4장 : 지배이념과 정치문화의 형성/변화

제1장에서는 조선왕조의 지배이념인 민본(民本)과 인정(仁政)이 단순한 수사나 허위의식에 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지배이념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정하게 구현되어야 했고, 그에 걸맞은 현실적 정치행위가 뒤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본과 인정 이념은 점차 지배층에게 윤리적 강제를 수반하는 중요한 규범이 되어갔고, 이는 지배이념에 기반한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제2장에서는 신문고·격쟁·상언으로 대표되는 직소(直訴)제도의 추이와 변화를 통해 국가권력 혹은 국왕과 백성 사이에서 정치문화가 형성·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했다. 직소제도는 민본·인정 이념의 실현이라는 통치이념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치폐를 거듭하면서도 왕조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특히 격쟁은 치자 측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특히 평천민층이 아래로부터 주체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조정이 이를 받아들여 16세기 중반 이후에야 법제화한 직소제도였다. 영·정조 연간에는 직소의 통로가 확대되고 민은(民隱)에 대한 격쟁 허용, 집단적 격쟁의 증가 등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갔다. 지역 주민들이 대표를 선발하고 원역을 위임하여 해결하려 했던 경험은,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질서 형성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19세기에 들어 세도정권의 성립과 매관매직의 성행이 인정을 외면하게 만들고 관과 민간의 소통을 차단하면서, 출구 없는 민중의 불만이 민란으로 폭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18세기 후반 이후 평민서당의 확산과 민중의 자발적 교육 경험 확대, 곧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노력이 지배이념의 민중적 내면화를 촉진했음을 확인했다. 유교적 규범의 확산과 민중층에 의한 내면화는 분명 지배층이 원하는 바였다. 그러나 이 내면화는 단순히 지배층이 원하는 순응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민중이 지배이념에 입각하여 지배층의 정사(政事)와 행위의 득실과 당부를 비판하고, 민본과 인정을 방기할 경우 그것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상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배이념의 확산은 역설적으로 민중의 저항을 정당화하는 규범 언어의 공유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18세기 후반 서당계(書堂契)의 고안, 한글 번역 교재의 보급, 직업적 고용훈장의 등장 등을 통해 서당교육이 평천민층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은 이 역설적 과정을 가속화하였다.

제4장에서는 향촌 차원에서 엘리트와 민중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치문화가 형성, 확산,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재지 사족들이 평천민층과 같은 마을 혹은 이웃 마을에서 혼거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17세기 이후 조직되기 시작한 상하합계 형태의 동계(洞契) 조직은 사족과 민중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교섭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신분 차별을 두는 규정이 사라지고 나이순으로 좌정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향촌질서가 큰 변화를 겪었다. 19세기에 들어 수령-이향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사족의 지위가 하락하고 중간 조정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오히려 소민들과 관권 간의 마찰이 격화되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특히 19세기에 들어 수령-이향지배체제의 강화와 사족층의 지위 하락은 중간 조정 세력을 약화시켜 관권과 소민 사이의 마찰을 격화시켰으며, 사족 가운데서도 민란을 주도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이는 지배이념을 공유하고 함께 체제를 이끌어 가던 국가권력과 지방사족 간의 심각한 균열, 곧 조선사회를 지탱해온 지배시스템의 한 축이 붕괴되고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5~6장 : 민중공론의 형성과 새로운 질서의식

제5장에서는 18세기 중반 이후 총액제·공동납 제도의 시행이 향촌사회에 불러온 변화를 분석했다. 총액제와 공동납은 부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말단 단위인 면·이(里)에서부터 공론이나 공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상식 내지 정치문화로 자리 잡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족 중심의 향회와 달리 신분 차별 없이 부세수취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 구조인 ‘민회’가 만들어졌다. 소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사족 중심의 ‘향중공론’과는 다른 ‘민중공론’을 형성해갔다.

이 ‘민중공론’의 형성은 단순한 부세 저항에 그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점점 더 평등성·공정성이 확대되는 속에서 서로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사례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향촌 주민들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해 나갔다는 사실은 향촌사회에서 새로운 공공적 기능이나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의 동심원적 정치 구조—동리→면→군현→도→중앙정부—를 고려할 때, 향촌 단위의 이 경험은 단지 지방적 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동리 단위에 국한된 원역이나 불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었으며, 이는 조선의 중앙집권적 체제가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공론을 전국적 의제로 증폭시키는 구조적 조건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민란과 동학농민전쟁을 거치며 더욱 구체적인 논의 구조나 체제 구상으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확인된다.

제6장에서는 19세기 민란에 지배이념인 민본·인정을 근간으로 한 정치문화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난민’들의 의식에는 국왕을 대신하여 탐관오리를 파면·징치함으로써 인정을 회복하겠다는 ‘대집행’ 의식이 강하였다. 탐묵한 수령으로부터 국왕의 징표인 인신과 병부를 빼앗고, 수령을 객사의 전패 앞으로 끌고 가서 국왕에게 사직 인사를 강요한 행동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민란의 비일상적 혼란이 극단으로 치달지 않고 곧 수습되는 것도 인정을 베풀겠다는 국왕의 약속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민란이 가진 의미는 인정 회복의 요구에만 그치지 않는다. 민란이 준비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향회와 다른 이회·민회·도회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론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히 고성민란에서 보이는 것처럼, ‘민회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 주민들에 의한 공론이 향촌 차원의 정치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수령의 인사권과 수세권을 감시·견제하는 중요한 경험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조선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고려할 때, 단지 향촌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 무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식의 태동이었다.

7장 : 동학농민전쟁의 정치문화와 체제 구상

제7장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이 민본·인정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문화에 있음을 확인했다. 교조신원운동 당시 보은집회 참여자들은 왕토사상·왕민사상 및 국왕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충효와 인·의라는 유교 덕목을 내세웠다. 민란이 지방관을 대상으로 인정 회복을 ‘대집행’한 것이라면, 동학농민전쟁은 그 대상이 중앙집권세력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농민군의 <포고문>에는 민본 이념·왕토사상·왕민사상 등에 의한 현실 진단과 비판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농민군의 목표는 민본과 인정 이념의 회복에 있었고, ‘반란’의 정당성도 거기서 구했다. 조선왕조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으며 ‘근대적’ 체제를 만들려는 의지나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⁴⁾ 그러나 민본·인정 이념을 회복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은 농민군의 의

도와 무관하게 지배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아래로부터 만들어 가는 결과를 낳았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집강소의 구성과 운영 원리이다. 집강소는 집강 아래 의원 혹은 의사원 십수 명을 두고 협의체로 운영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공동납을 계기로 형성되어간 '민회'류의 논의기구, 그리고 민란 당시 '민회소' 등 아래로부터 형성해간 새로운 정치질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나아가 동학농민전쟁 최고 지도자 전봉준은 일인 독재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몇 명의 훌륭한 선비들”이 ‘합의법’에 의해 서로 협의하여 정국을 운영하는 일종의 연합정권과 유사한 체제를 구상했다. 이는 그 자체로 ‘입헌군주제’ 같은 근대적 체제구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원군의 섭정을 요구한 것이나 이러한 합의제적 체제 구상은 국왕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왕 중심의 지배질서에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또한 국왕의 정치적 위상을 상대화하면서 민중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개혁 구상이었음은 분명하였다.

8장 : 트랜스히스토리컬한 체제 구상과 근대중심주의 비판

제8장에서는 조선후기의 정치·경제적 체제와 동학농민군의 체제·토지개혁 구상을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했다. 조선사회는 건국 당시부터 정치체제 면에서 서구나 일본에서는 근대와 함께 갖추어지는 중앙집권적 체제와 관료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체제를 만들고 지탱하는 다른 질서나 이념-지배이념으로서의 주자성리학, 전제왕권, 강력한 역상(抑商) 정책-은 근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거나 매우 달랐다. 반면 조선후기 토지소유구조에서 보이는 배타적 소유권이나 매매관습에서 보이는 매수자 우위의 관행은 근대 이전의 유럽이나 중국과 비교해도 매우 '근대적'이고 '시장친화적' 성격을 보였다. 이처럼 '근대적' 토지소유구조와 '전근대적' 전제왕권 및 역상 정책이 공존했던 조선사회의 성격은 서구중심적·근대중심주의적 역사인식이나 시간관, 그에 의한 시대구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동학농민군의 개혁 구상은 이와 정반대의 성격을 보였다. 정치적으로는 민회와 집강소로 이어지는 아래로부터의 분투 과정에서 전제왕권 체제에 균열을 내고 '합의법'에 의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왕토사상에 입각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자유로운 매매를 금지하는 '평균분작' 구상을 제시하여, 조선후기에 성립되어 있던 토지의 자유로운 매매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말하자면 조선후기에는 '근대적' 토지소유구조가 '전근대적' 정치체제와 결합되어 있었던 반면, 동학농민군의 개혁 구상은 '비근대적' 토지개혁과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정치체제 구상을 결합하는 방향을 지향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의 체제구상은 조선후기에 작동하던 정치적·경제적 체제 구성과 서로 뒤바뀐 모습이다. 곧 조선후기에는 '근대적' 토지소유구조와 매매관습이 '전제적' 정치체제와 신분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억압적 시장경제와 결합하여 오랜 기간 공존하였고, 그에 따라 백성들은 정치적 자율성을 억압당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겸병이 확대되어 가는 속에서 특히 대부분의 평천민들은 경제적 불평등에 방치되어 있었다. 반면 동학농민군의 개혁 구상은 이와 정반대였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전제정치 체제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아래로부터 새로운 정치체제의 가능성을 열

4) 당연한 말이지만, 동학농민군의 생각이 보수적이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민본과 인정을 향한 동학농민군의 치열한 노력은 위기에 처한 근대를 새롭게 하거나,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거나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동학농민전쟁에 내포된 다양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동학농민전쟁의 성격을 '반봉건·근대지향' 운동으로 이해하는, 그리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동학농민군의 생각과 행동을 독일농민전쟁이나 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보다 길게는 수백 년 뒤진 아류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기존의 통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어감으로써 억압되었던 평천민의 정치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그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가능성 역시 더 넓어지고 있었다. 또한 왕토사상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조장하던 사적 소유와 자유로운 매매를 금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 억제하는 ‘평균분작’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핀 본 조선후기의 체제와 동학농민군의 체제 구상은 어느 쪽이나 근대중심적 역사 인식이나 시간관에 균열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트랜스히스토리컬(transhistorical) 내지 트랜스템포럴(transtemporal)한 체제 구상 혹은 ‘대안적 시간관’에 대한 구상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9장 : 근대에 의해 억압된 대안적 가능성

제9장에서는 19세기 민중운동이 아래로부터 형성해 간 새로운 향촌질서나 정치체제 구상, 토지 개혁 구상 등에서 보이는 새로운 질서·체제의 가능성이 동학농민전쟁의 패배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 ‘근대 지향’의 엘리트들이 추구한 ‘근대적 구상’에 의해 억압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갑오·을미개혁기 유길준의 향회론이나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은 신분적 제한은 배제했지만 그 대신 빈부 차별을 제도화하였다. 1895년 공포된 <향약판무규정>과 <향회조규>에 따르면, 면 단위 이상의 향회 구성원 가운데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주민들이 사실상 과반을 차지하게 되어, 부역을 부담해야 하는 대부분의 소민들은 상급 향회로 올라갈수록 논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도 의관의 자격을 국가에 유공한 자 또는 근대 서구의 법률과 정치적 학식이 있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향한 경험을 축적해온 민중을 배제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개화파가 추진한 개혁방안에는 기왕의 토지소유구조나 토지 제도를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갑오개혁을 주도한 김윤식·유길준은 서구 근대로부터 수용된 사적 소유권의 절대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토지재분배론, 즉 지주제 철폐에 반대했다. 이는 사유재산과 토지 겸병을 옹호·절대화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근대적’·‘자본주의적’ 인식이었다. 이처럼 근대적·자본주의적 향촌질서와 정치체제·토지제도가 추진되어 가는 과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제도화·법제화해 가는 과정이었으며,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가던 새로운 질서-서로 다른 시간들의 결합과 재배치를 통해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의 가능성-가 억압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특히 동학농민군이 조선후기의 정치·경제적 체제를 극복하고 민본과 인정 이념을 회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던 트랜스히스토리컬 내지 트랜스템포럴한 대안적 체제구상의 가능성도 함께 억압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근대 문명’이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을 구조화·법제화하는 속성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만악의 근원’으로 이해되어 온 불평등이 이제는 기후생태위기도 가속화시킨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근대중심적 역사인식’과 그에 기반한 역사이해는 근원적으로 성찰되어야 한다.

9. 나가는 말 : ‘근대중심주의’를 넘어

전지구를 지배해버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압도적 영향력은 그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마크 피셔가 지적한 ‘자본주의 리얼리즘’, 즉 “자본주의가 유일하

게 존립 가능한 정치·경제 체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에 대한 일관된 대안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널리 퍼진 감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 과정은 예정조화된 것이 아니다. 중세도 근대도 다양한 가능성들의 경합 속에서 결과적으로 선택되었거나 승리한 것일 뿐이며, 그 기간도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더구나 서구와 근대가 모두 위기에 처하고, 그 폐해와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서구’나 ‘근대’는 더 이상 (특권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가 아니다.⁵⁾ 추구되어야 할 것은 적어도 ‘더 나은’ 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대’여야 하며, 나아가 ‘근대’의 극복과 근대 너머의 대안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 ‘민중’ 개념과 민중운동사 연구 역시 비판적 역사학으로서의 현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달라진 ‘현재’와 새로운 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현재적’·‘비판적’ 가능성의 단서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학은 내셔널리즘이나 발전론적 인식, 근대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모두 넘어서는—자연까지 포괄하는—상상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5) 물론 서구나 근대가 추구해온 법이나 제도 가치를 모두 반대하거나 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특권화하지 말자는 것, 특권화를 통해 비서구나 전근대의 다양한 경험들을 억압,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다. 서구이든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이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도 여전히 ‘서구’나 ‘근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매우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완벽한 ‘서구’나 ‘근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토피아가 아님은 물론, 무수한 어두움이 함께 한다는 점도 현재로서는 분명하다. 그래서 ‘서구’나 ‘근대’를 특권화하고 그것을 추구만하는 인식론은 명백한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위험하다.

서평 : 민중운동의 정치문화와 민중적 자율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 《19세기 민중운동과 정치문화》(배항섭, 경인문화사, 2025)를 읽고 -

왕 현 중(연세대)

1. 책을 접하며

이번 배항섭 선생의 저작《19세기 민중운동과 정치문화-서구중심적 근대중심적 이해의 너머》(경인문화사, 2025)는 표지 제목부터 심상치 않게 되어 있다. ‘정치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의 용어도 주목되지만, 책의 부제로 부여한 ‘서구중심적 근대중심적 이해의 너머’라는 시각은 생소하면서도 필자의 평소 지론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서 적합하다는 인상이다. 책 제목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전체 책 내용의 요약과 지향점을 그대로 간파할 수 있다는 점이 일종의 예단, 혹은 첫 인상을 깊게 각인시키고 있다.

이 서평 글은 전체 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책에서 다루고 있듯이 조선시대 5백년 간을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넓고 깊이 있는 비평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의 저작은 적어도 30여 년간 자신의 수많은 논문과 개별 저서와 공저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웬만한 비평가의 수준에서는 무려 백여편에 이르는 배선생의 고담준론을 쉽게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평자의 입장에서는 작년 그의 글을 한번 비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용기를 내어 비평문을 작성해 보고자 하였다(배항섭, <동학농민전쟁 : 민중운동사에서 민중사로, 그리고 그 이후>,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코리아 저널에 실렸으나 비평문을 별도로 실리지 않았음).

2. 책의 구성과 논지에 대한 다섯 가지 의문점

그러면 책의 내용에 대해 각 장별 목차를 소개한 후, 전체적인 논지를 부의 구성으로 재편하여 간단히 요약해 보려고 한다.

서론

제1장 조선왕조의 지배이념과 정치문화 : 민본과 인정

제2장 조선시대 직소제도와 정치문화

제3장 민중교육의 확대와 지배이념의 확산

제4장 조선후기 향촌 질서의 변화와 민중의식

제5장 부세제도의 변화와 ‘민중공론’의 대두

제6장 19세기 민란과 정치문화

제7장 동학농민전쟁의 정치문화와 새로운 체제구상

제8장 아래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체제구상과 근대중심주의의 너머

제9장 '근대'에 억압된 새로운 체제의 가능성

결론

이 책은 모두 서론과 본론 9장, 결론 등 11장의 구성으로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서론과 1부(1장 ~ 5장), 2부(6장 ~9장) 등 3등분 할 수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역시 서론에서 제시되는 <19세기 민중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 비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책을 독파하는데 첫 번째 허들이 된다.

19세기 민중운동사 연구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그동안의 연구 흐름을 간단히 서구중심주의(eruocentrism)와 근대중심주의(moderncentrism)로 규정한다(4쪽). 유로센트리즘은 20세기 중반 탈식민지화와 국제주의의 맥락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주로 1970년대 이후 사미르 아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근대중심주의도 일반적으로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재단하려는 근대주의, 혹은 현대 중심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책 본문의 두 번째 페이지부터 서구의 근대학설사, 제국주의의 식민주의, 근대주의, 근대주의적 민중해석 등의 이론적 토대를 사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책의 읽을 용기를 갖기 어렵게 되어 있다. 실제로 6쪽의 각주 6)의 경우에는 필자의 기왕의 주목할 만한 논문 제목이 빼곡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도입부의 구성은 초심의 독자들에게 넘어가기 어려운 만리장성의 장벽처럼 느껴지게 한다.

다음으로 19세기 민중운동사 연구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해, 그리고 근대를 특권화하고 전근대를 식민화하는 역사인식인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서론의 비판을 살펴보자.

첫째, 서구중심주의 비판 : 1) 지주제=봉건제라는 시각(서구의 영주 농노로 해석)에 대해서는 지주와 작인은 반드시 신분적 지배-예속관계가 겹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가설 지주제 철폐로 '두가지 길 이론'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중층적 소유구조를 배타적 소유구조로 만드는 일이었는데, 실제로는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사실상의 배타적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 대한 외면(여기서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시드니 태로우, 찰스 킬리, 홍호평 등의 연구 재인용)이라는 연구의 편향을 비판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법과 제도, 질서, 정치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외면했다고 정리했다. 소결론으로 조선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간들을 서구 중심적, 근대중심적 시간관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이다(20쪽).

둘째, 근대중심주의 비판 : 19세기 민중운동이 '근대'를 지향했다는 점은 민중의 생각과 행동을 부르주아의 그것으로 전유하는 시각으로 민중의식의 독자성을 외면하는 것이다(21쪽). 이러한 논리를 폈던 조경달, 정창렬, 고석규 등 연구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토대 반영론적 시각으로 몰아치고, 반면에 반근대지향론, 혹은 반자본주의지향론 등도 역시 내재적 분석에 의한 귀납적 접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준거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적이며, 서구중심적 역사인식의 자장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비판한다(24쪽). 예컨대 동학농민군의 토지관련 요구나 구상은 근대지향, 혹은 반근대지향 어느 한쪽으로 특정하기 어려웠고, 굳이 표현한다면 '비근대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였다(25쪽)고 평가하였다. 결국 근대중심주의는 역사적 시간이 근대를 향해 '발전'해 간다는 단선적 발전론에 입각해 있다고 비판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비판론자로는 톰바, 두셀, 차르테지 등을 재인용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접근이나 비교사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통해서 획일적인 근대가 아니라 복합적, 다층적, 다면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하였다.

이 책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과제는 민중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민중과 민중의식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계층적, 계급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며, 민중에 대한 목적론적인 연구가 아니라 민중의식의 자율성 내지 독자성, 민중의 삶과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 책의 제목에서도 적시된 ‘정치문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창렬의 설명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임술민란시 민중들이 국가 국왕에게 민본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주장하였던 연구에서 원용하고 있다. 민중은 지배엘리트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영역이나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민중의식이 공동체적 일상생활, 그리고 전통적인 권리나 관습과 관련이 깊다는 점”(톰슨의 평민문화 개념을 원용), 또한 “민중의 생활을 지탱해온 관습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해온 법이나 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것”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민중들이 수용해온 관습이나 전통적인 법과 제도의 다양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저서에서 제시하는 개념 문제로서 ‘정치문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다소 낯 설은 개념으로 “특정한 공동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활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정치저담론과 실천에서 보이는 경향”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이것과 유사한 개념 사용의 용례로서는 ‘모럴 이코노미(도덕 경제)’라는 개념도 그렇듯이, 정치문화는 지배층의 입장에서의 정치문화와 민중들의 입장에서의 정치문화가 서로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만, 하나의 개념을 둘러싸고 지배층의 이해와 피지배층의 이해 방식이 다를 수 있다면 이를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첫 번째 의문은 민중들은 조선왕조국가의 유교주의적 지배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치문화를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저서에서 지배층의 유교주의, 유교적 정치제도 등과 구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로부터 이해하는 민중의 정치문화’로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비평자의 첫 번째 질문이다.

다음으로 <19세기 민란과 정치문화> 등 2부에서 설정한 조선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필자가 19세기 조선사회의 특징을 수령-이향체제와 사족의 향배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1) 흥경래란과 변란의 정치문화 : 변란의 주도층은 민간에 널리 퍼져있던 정감록류의 비기와 이단사상을 이념적 무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왕조타도를 내세우면서도 이상적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인정과 민본 등 지배이념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즉 당시의 지배이념과 그와 관련하여 형성된 정치문화가 관철되고 있었다(296쪽). 난민의식이나 왕조 정부의 태도는 모두 민본과 인정 이념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1862년 민중항쟁의 원인은 세도정권의 성립과 매관매직의 성행으로 권력과 지방관으로 하여금 민본과 인정 아님을 방기하고 관과 민간의 소통을 외면하게 된 결과라 보고 있다. 또한 <민란과 새로운 질서의식의 형성>(335~364쪽)에 대해서는 민중에 의한 집단적 호소, 스스로의 힘으로 폭력적 저항운동으로 전개되어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질서의식 내지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갔다는 시각으로 설명했다. 민회, 민소, 민회소, 이회, 면회, 읍회 등으로 쓰였는데, 대소민인이 함께 참여하거나 소민들만이 참여하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민회’임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사족과 달리 기왕의 제도나 질서, 관행을 전복하려는 ‘민중적 공공성’을 내장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자신들의 공론에 따

라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예컨대 1894년 7월 고성민란의 경우 난민들이 민회소를 통해 민막 29개조 절목을 마련하여 하나의 지침을 세우고 수령의 인사권과 수세권을 견제해 나갔다. 19세기에는 새로운 향중 공론을 주도하는 사족이 아닌 다양한 출신에 의해서 주도하기 시작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 ‘민중공론’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 해명은 매우 미흡하다. 개괄적이거나 결론적인 논조에 의해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중항쟁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그것이 갖는 특징은 1862년 농민항쟁의 발발 지역 70여개만 해도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민중운동의 추세는 개별화, 다양화를 하는 가운데 그것과의 상호연관성, 공통적인 특성을 동시에 포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의 서술에서는 대체로 전반적인 추세와 공통성 추출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양한 민중운동의 갈래와 특징을 설명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례연구의 일반화, 혹은 보편화를 할 때 부딪치는 근본적인 방법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서의 핵심적인 논거로 제시된 ‘향중공론’과 ‘민중공론’의 구별과 특성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의 질문이다.

다음으로 <7장, 동학농민전쟁의 정치문화와 새로운 체제구상>(373~439쪽)에서는 우선 “조선후기 이래 형성되어 간 민본과 인정을 요체로 한 민중의식과 정치문화는 민란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고 확산되었다. 이는 동학농민전쟁의 전사라 할 수 있는 교조신원운동에서도 표출되고 있었다. 보은집회 참여자들은 왕토사상과 왕민사상 그리고 국왕의 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충효와 인의라는 유교의 덕목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 행동을 더욱 튼튼히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와 무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또한 동학교도들이 포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조차 민본과 인정이라는 당대의 정치문화에 깊이 규정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이때 민란이 지방관을 대상으로 하여 민본 이념과 인정회복을 집행한 것이라고 하면, 1893년 보은집회에서는 민중이 자신들의 직접적 행동을 통해 척왜양 혹은 민본 이념과 인정 회복을 실현하겠다고 보기보다는 ‘조정에 아뢰어’, 곧 ‘국왕에게 호소’하는 청원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입장이었다(375쪽). 이때 고을의 경계를 넘어 수천 명의 동학교도와 일반 민중이 모여 집단적 소원운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성과 새로운 정치질서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391쪽).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은 교조신원운동이나 척왜양운동과는 달리 청원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민본과 인정을 방기한 조정의 대신들과 지방의 방백 수령을 쫓아내고 민본과 인정이념을 회복하겠다고 천명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다(396쪽, 각주 39)참조).

여기서 특히 강조한 것은 1894년 3월 20일에 무장에서 공포한 <포고문>이었다. 그 내용 분석에서 초기 포고문이기 때문에 국왕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임을 강조해 유교의 언어와 사상으로 분식되어 있다는 평가(신용하의 견해)를 비판하고, 유교적 언어, 유교적 사유에 의한 현실 진단과 비판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농민군이 제시한 격문 통문이나 그들이 요구한 <폐정개혁안>은 대체로 유교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천년왕국적 비약[개벽]이나 이른바 근대지향적 “혁명”과 거리가 멀었다고 하면서 왕조체제의 지배질서 그 차제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도 없었다고 단정하였다. 여기서 1893년 보은집회 전후의 민중의 수동적 입장에서 1894년 1차 농민전쟁에서 주동적 입장의 전화, 민본과 인정을 강조하는 보국안민의 주체로 격상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존의 조경달의 견해를 비판하는데, 동학농민군이 가지고 있던 민본과 국왕환상을 비판하면서 동학농민군은 스스로를 보국안민의 정치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다(415쪽, 63) 각주 참조).

한편, 필자는 농민군이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의 섭정이나 감국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탐관오리의 제거, 그리고 인정의 회복과 국가의 위기 극복으로 현재의 국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개입되어 대원군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하에서는 민중의 주체적인 참여방식, 특히 집강소의 설립이나 합의법에 의한 정치 참여 등에 대해서는 민중의 단계적인 발전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집강소의 이러한 구성과 운영원리는 조선후기, 특히 공동납 등을 계기로 형성되어 갔고, 민란 당시 '민회', '민회소' 등 아래로부터 형성해간 새로운 정치질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상하 신분의 차별을 부정하는 동학사상, 그리고 동학의 전파 과정과 농민전쟁 과정에서 축적되어간 평등 지향의 경험들에 뿌리를 둔 의식의 표현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유교적 정치이념의 민중적 재인식, 혹은 재해석을 통해 국왕에의 인정기대와 그 극복으로서 새로운 체제구상이라는 측면이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요컨대 7장에서 정의한 동학농민전쟁의 정치문화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세밀한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새로운 체제구상'이라고 하는 명명되지 않은 '새로운'이라는 방점에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1차 농민전쟁시기에서 집강소 시기에 주장하는 보국안민의 구체화와 이들의 체제개혁 구상은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바꾸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문제로서 예컨대 신분제의 해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필자의 소론을 듣고 싶다. 이것이 평자의 세 번째 질문이다.

제8장, <아래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체제구상과 근대중심주의의 너머>(443~525쪽)과 제9장 <'근대'역>에 관해서는 우선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개혁의 구상에 대한 부분이다.

“민란에서는 토지개혁과 관련한 요구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지만, 동학농민전쟁에서는 토지의 '평균분작' 개혁안이 구상되고 있었다. '평균분작' 구상은 지주제를 폐지하고 모든 농민에게 토지를 균분하여 경작하게 하자는 것으로 사상적 배경에는 <무장포고문>에도 명시되어 있던 '왕토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평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평균분작'에 대한 해석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인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농민군의 염원에서 나온 것으로 조선시기 많은 관료 지식인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균전적 토지개혁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균분작'의 요구는 그동안 사적 토지소유권의 개혁이나 지주소작제를 넘어서는 농민적 토지 경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는 16세기 이후 조선시기의 지배적인 토지제도가 사적 소유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매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타당성은 극히 의심되거나 농민의 토지개혁 구상을 왕토사상에 입각한 사적 토지소유권의 재분배론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물론 기존의 토지개혁구상에 관한 여러 편의 논저에서 피력해온 바이다(배향섭,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나타난 토지개혁 구상」『사총』43, 1994 ; 「'근대이행기'의 민중의식: '근대'와 '반근대'의 너머 - 토지소유 및 매매관습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역사문제 연구』23, 2010 ; 「조선후기 토지소유구조 및 매매관습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한국사연구』149, 2010 ; 「19세기 조선과 베트남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 토지소유를 둘러싼 제도와 관습의 차이를 중심으로 -」『역사학보』206, 2010). 그렇지만 초기 연구에서는 '평균분작'은 “조선 시대의 토지소유구조가 이미 근대적 소유권을 방불할 만큼 배타적으로 확립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민간에서도 지주제를 구래의 상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지주제의 철폐를 전제로 한 토지 개혁 요구는 기본적으로 빈농적인 요구”였다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농민군의 토지개혁 요구는 전면적 요구로 등장하지 않았으며, “왕토사상에 입각한 토지개혁론이 농민들이 구상한 하나의 대

안으로 분명히 자리잡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위의 논문 결론 140쪽, 참조). 그렇지만 이때에는 ‘평균분작’을 빈농층의 요구라고 해석한 반면, 이번 책에서는 보다 분명히 하여 조선후기에 성립되어 있던 토지의 자유로운 매매를 부정하는 개혁방안이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근대’와는 거리가 먼 구상이었다고 단정하였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개혁구상은 토지소유와 관련되어 왕토사상에 입각하여 ㄷ지소유의 불평등을 조장하던 사적 소유와 자유로운 매매를 금지하는 ‘비근대적’ ‘평균분작’을 구상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논리적 설명 문제는 조선후기 토지소유구조가 근대적인 사적 토지소유제도와 동일한 것인가, 그리고 사적 지주제의 확대 발전과 같이 작용하고 있는 지주소작제의 확산과 무전농민의 증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토지소유와 경제 모순의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말하자면, 당시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요구는 토지소유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하고 하면서 왕토사상에 의한 토지재분배론을 변화되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관점의 오류는 조선시대 토지소유의 구조를 사적 토지소유제=지주제로 일원화시켰다는 데서 발생한다. 조선시대의 중층적 소유가 조선후기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실 궁방 역둔토 등 관유지의 토지와 일반 농민과의 관계에서 관유지(공토)와 일반 민전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농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영농민과 지주소작제의 소작농민으로 나뉘어져 있고, 조선후기 내내 지주소작제의 발달로 자영농민의 무전농민화, 자소작농민화 등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민층간의 계급투쟁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둘러싸고 국가(혹은 왕실)과 지주(양반 향리, 일반 민인 등), 소작농민과 3자 관계가 길항관계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지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봉건 부세의 문제가 중첩되어 국가·지주·농민간의 3자 대립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조선후기 농민의 존재형태에 대해 복잡한 구도로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농민들의 토지개혁 구상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구조와 농민의 존재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네 번째 질문이다.

다음으로 둘째, 정치적 개혁구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제의 구상이라는 부분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갑오·을미개혁기의 <향회론>이나 독립협회의 <의회설립론>을 조선후기 이래 향촌사회 내부로부터 형성되어 가던 새로운 공론과 논의기구,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이 만들어 가던 새로운 정치체제 구상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해 보고자 했다. 그래서 갑오·을미개혁 시기에 박영효, 유길준 등이 제시하였거나 시행되기도 한 향회론은 조선후기 이래, 19세기 민중운동을 통해 아래로부터 형성되어가던 가능성을 억압하였다. 갑오·을미개혁 시기의 향회론은 향회 구성원에 대한 신분적 제한을 배제하였지만, 그 대신 빈부차별로 대체되었다. 1895년 11월 3일 공포된 <향약판무규정>과 <향회조규>에서는 면단위 이상의 향회 구성연들 가운데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이 사실상 과반을 차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향중공론”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자들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개화파가 법제화한 향회는 조선 후기에 들어 형성되어 간 ‘민회’류의 새로운 논의기구, 그리고 동학농민전쟁 당시의 집강소가 신분적·경제적 차별을 배제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던 향촌사회 운영원리나 공론수렴 과정(공론장의 개방성, 공정성, 동등성),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대표의 선발과 위임을 통해 새로운 ‘민중공론’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려는 의지와 노력, 다양한 가능성을 억압, 횡령하고 말았다”고 하였다(551~552쪽). 이상과 같이 개화파의 지방제도 개혁론과 동학농민군의 집강소 등의 정치구상과는 서로 상반된 계층적 대립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위로부터의 근대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근대개혁의 2가지 길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진다. 그럼에도 기존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아래로부터 형성해 온 새로운 향촌 질서나 정치체제구상, 토지개혁 구상등에서 보이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의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정치구상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중공론’을 조장하고 공동체적 민주주의의 수립을 추구한다고 하는 의미가 기존의 개화파, 유길준의 지방자치제의 구상과 대비될 뿐 그 내부의 특성과 단계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향촌에서의 산적한 사회적 관계의 청산, 양반·평·천민간의 정치적 갈등과 참여 과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시기 민중운동에 참가한 각양의 계층의 입장들이 서로 녹여들어가는 민주주의적 과정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이것이 사적 소유권 보장 내지 부르주아 민주주의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민군의 정치구상과 관련된 민중의 권리 의식이 하나의 주권의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저서의 전체 논리 구조와 대안적 모색

본 서평에서는 본론 1장 ~5장까지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려고 한다. 1장에서 언급된 조선왕조를 개창한 주체세력이 내세운 지배이념으로 민본(本)과 인정(仁政)을 거론하고 2장에서 영·정조 연간 신문고의 재설치와 격쟁의 부활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져 국왕과 민 사이의 소통이 다른 시기에 비해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지만, 19세기 세도정권 시기에는 도리어 직소의 내용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3장에서는 18세기 후반 평민서당의 대두에 주목했으며, 한글로 번역된 교재 보급 등을 통해 유교의 확산과 민중층에 의한 내면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4장에서 조선후기 향촌질서의 변화를 다루면서 사족의 지위 상실과 더불어 이전까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단성민란의 김인섭과 같이 민란의 주도자가 되어 관권에 저항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5장에서는 부세제도의 변화에서 총액제와 공동납의 변화에 주목하고 향회나 향중공론에 참여하는 신분적 차별이 약해지면서 대소민인이 함께 하는 논의기구가 등장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1부의 구성은 2부의 논지를 보강하기 위한 배경 장치로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체 논의의 구조를 이해하는 선에서 1부의 설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바로 전체 책의 구성과 논지에 대한 총괄적인 비평으로 할애하려고 한다.

우선 책의 저술 의도와 관련하여 첫째, 2020년대 동학농민전쟁의 연구사와 대비하여 연구사적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민중의 자율성 파악에 대한 문제시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이다. 필자의 관점은 1980~90년대 소위 민중적 민족주의론에 입각한 ‘변혁주체로서의 농민운동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민중론이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는 1세대 연구자 김용섭, 신용하, 2세대 연구자 정창렬, 그리고 조경달을 대상으로 하여 근본적인 비판을 가했다. 전근대시기 민중의 자율성과 민중의 정치문화에 대한 인식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제 논의를 펼쳐나갔다.

이 책의 또다른 저술 의도는 동학농민군의 근대 지향에 대한 조경달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파악된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국왕에 대한 인정 기대와 보국안민의 주체로서 전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전의 책에서는 “물론 농민군의 생각을 오로지 유교와의 관련 속에서만 이해하거나, 유교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중은 지배이념이나 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지배엘리트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영역이나 의식세계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민중의 생활과 의식은 지배이념에 규정되면서도 그와는 다른 차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점에서 민중문화에는 확실히 어떤 독자성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민중경험과 마이너리티-동아시아 민중의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1917).

필자의 민중의 특성에 대한 내재적 접근 방법은 외국의 이론이나 외부적 영향을 배제하고 운동 자체의 이념과 발전과정을 살피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이러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당시 민중들이 생각하는 동학의 이념이나 유교주의의 이해, 그리고 개화파류의 근대 구상의 수용 등에 대해 어떻게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실 저자는 분명하게 본 저서의 출발점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2년에 발표한 「‘새로운 민중사’ 이후 민중사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역사문제연구』 48, 2022.7.)에서 이 책의 기본발상과 고민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민중사’ 논문의 요점은 조경달이 주장했던 전근대와 근대의 정치문화에서 보이는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민중을 근대에 간단히 회수되고 포획되는 타율적인 존재로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로부터 도피하는 민중상, 곧 근대와 만나면 자율성을 상실하고 만다는 점에서 조경달의 수동적 민중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었다. 조선후기 민중 역시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유교라는 지배이념을 내면화해 나갔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속에서, 또 외부로부터 새로운 영향을 받고 그것을 전유함으로써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었다고 파악한 것이다(위의 논문 31쪽). 따라서 지배이념이나 정치체제, 관습이나 사회적 환경과 무관할 수 없는 민중의 생각이나 행동 역시 ‘근대’ 혹은 ‘반근대’양자 어느 일방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복합적 다층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본 저서에서는 이제 조선시기 정치문화를 국왕을 중심으로하는 유교주의에 입각하고, 이를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민중적 시각으로 ‘정치문화’를 새롭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본 저서의 관점은 이전의 비판점(2022년 ‘새로운 민중사’ 논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의도하고 있듯이 조선의 유교적 지배질서에 대한 비판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민중의식의 새로운 해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비판해 온 민중의 자율성 성격에 대한 파악을 19세기 말의 시점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민중의 독자적 성격을 근대 지향적이지도, 반근대지향적이거나 비근대지향적이라고 부정적인 논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보다 명확하게 연관된 정의를 내놓지 못하는 느낌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민중의 유교주의 수용의 정치문화를 국가 내지 양반지배층과 다른 민중적 범주를 별도로 설정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래로부터 정치문화’라는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책에서는 민중운동의 개혁 요구와 변이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책의 전반에서 1차 사료와 그것을 반영한 유자 혹은 정부의 관련 기록에 대해서 상호 비교하는 측면에 생략되어 있다.

또한 ‘사발통문’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의식세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로 대체되더라도 포고문, 격문 등을 작성하면서 느끼고 있을 민중의 개혁 구상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본문에서는 ‘무장창의문’을 ‘포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면서 이 포고문에서는 유교주의에 입각한 분식된 논리라는 기존의 해석을 배척하고 농민

군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인정과 민본이념을 회복하겠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스스로 보국안민을 실현할 정치 주체로 선언한 것이라는 강조하고 있다(400~413쪽).

그런데 보국안민의 정치주체 선언이 과연 집강소 시기 지방통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고, 2차 봉기에서 전국적인 정치개혁의 요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동학농민군 지도부와 관련하여 전봉준 등이 2차 봉기때 제기한 <상서문>(1894년 10년 16일, 박제순에게 올린 전봉준 상서문, 혹은 <고시문>(11월 12일 경군여영병이교시민, 한글)에 대해 분석을 첨가하지 않았다. 특히 앞서 <포고문>에서도 동학배, 동도창의소 등의 표시로 보아 전쟁지도부가 일정하게 동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포고문 등에서 보국안민의 이념과 동학과의 관계, 그리고 2차 봉기시 조선정부와 일본군의 침탈에의 입장 등을 전개 국면을 다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1894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와 참여농민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1890년대 민중운동의 추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893년 교조신원운동, 특히 보은집회를 계기로 하여 전봉준 등 남접 중심의 지도부와 최시형 등의 교단지도부 사이의 운동 주도권과 이념을 둘러싼 갈등을 벌였고, 이에 보은집회를 계기로 하여 운동의 주도권이 남접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통설이 있다. 이에 대해 1893년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표출된 척왜양과 보국안민의 기치가 어떻게 착종되고, 대립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념적 지향을 내세우는 정치집단의 교체, 즉 동학교단 위주에서 전봉준 등 남접 중심의 변혁세력의 정치적 지도권의 교체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만일 민중들의 동원과 지도자의 결합으로만 해석한다면, 양자를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반면에 2개의 층위간의 갈등과 단절로 본다면, 서로 대치하여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측에 대해 과연 융합적인 인식과 행동을 취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를테면 분풀이식 아래로부터의 혁명 활동을 어느 정도 제어 통제하고자 하는 전봉준 등 지도자들의 노력이 1894년 5월에서 8월까지 집강소 체제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다.

또한 농민군의 지도이념이라고 하는 보국안민의 취지도 언제 어떻게 지도이념, 혹은 개혁구상의 핵심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동학농민군의 정치문화와 체제구상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사상과 실천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전체 운동과정에 참여한 다수 민중의 사상과 행동을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지도자그룹에 한정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선 의문이 든다. 지도부와 참여층과의 관계 중에서 1차 농민전쟁이후 집강소, 2차 봉기 이후 참여 양상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2차 농민전쟁에 적어도 10~20만여명의 참여층의 확대가 과연 농민군의 자율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나아가서는 농민군 패배의 내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네 번째의 문제점은 저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재, 혹은 미래적인 지구사의 관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관련지어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저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주장된 근대중심주의의 극복, 글로벌한 차원의 연대와 대응, ‘역사적 시간을 넘나드는’ 방법 등이라는 선형적인 지향점 주장이 과연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나능한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농민전쟁인식은 이전에 필자의 저서에서 일부 주장되기는 했지만, 본 저서의 발간에서 좀더 강조하게 된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첫 저서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경인문화사, 2002)을 발간한 이래,

2015년에는 『19세기 민중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성균관대학 출판부, 2015)을 거쳐 자신의 문제 의식을 심화한 이번 책의 발간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늘날 2026년의 시점에서 1894년 농민전쟁을 어떻게 소환하며 재평가할 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농민전쟁에 대한 미래적 전망은 무엇인지,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와 21세기 글로벌 역사의 차원에서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고 싶다.

서구적 도식을 넘어 한국의 문법으로 19세기 민중운동 읽기
: 배항섭, 『19세기 민중운동과 정치문화-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이해의 너머-』,
경인문화사(2025)

김 창 수(전남대)

토론자는 조선-청 관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기에 대한 역사상, 더구나 민중운동이라는 사회적 변동에 대해서 토론자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매우 얇습니다. 그럼에도 평소 저자의 연구에 많은 영감을 받아온터라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작비평회의 토론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은 ‘비평’의 영역보다는 ‘질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더하여 조선 후기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 저작의 의의

1) 기존 민중운동 연구의 서구중심적, 단선적 대립구도 비판

저자는 기존 민중운동 연구가 서구의 역사 발전론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기존 연구들은 19세기 민중운동의 성격을 반봉건으로 규정하고 근대성을 지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중운동이 촉발된 요인을 생산수단(토지)을 둘러싼 계급 갈등으로 전제하거나, 해당 운동의 성격(지향점)을 지주제의 불식 및 근대적 자본주의 생산관계로의 전환, 토지개혁(사적 토지소유의 확보) 등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위와 같은 논의 구도가 서양의 근대 이행에 관한 통설(주로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론)을 선형적으로 전제한 것으로 그 근저에는 서구중심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조선후기의 역사적 조건이 서양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서구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전제로 삼았지만, 조선의 중세는 서구의 그것과 비교해 토지사적소유가 확립되었고, 서양 중세와 달리 중앙집권적 관료체제가 고도로 발달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역사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민중운동의 성격,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 문제의식입니다.

2)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 ‘정치문화’의 적용

저자가 지적하는 민중운동의 또다른 문제점은 민중운동의 내재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19세기 민중운동으로부터 외재적으로 설정된 근대적 요소들을 검출하려고 했으며, 민중들의 요구,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작동하는 사회문화에 대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민중운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치문화’를 제시합니다. 정치문화는 특정 사회에서 서로 다른 집단들이 요구하는 내용, 그것을 공식화하는 제도, 압박하는 전

락, 요구 해결, 경쟁하는 주장에 대한 권위 있는 조정, 구속력 있는 결정 절차와 행위를 통칭합니다. 저자는 ‘정치문화’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민중운동의 역사성을 당대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하여 조선 후기 ‘정치 문화’의 이념으로 유교 통치의 사상인 민본(民本)과 인정(仁政)에 주목하였습니다. 조선왕조가 유교의 보급을 국시로 삼았고 이에 따라 양반 등 지배층 뿐만 아니라 평민·천민 등의 피지배층까지도 유교의 교화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지배층은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거나 지배층의 문제를 지적할 때 민본·인정을 전유하여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피지배층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도 갖추어져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전달 장치로서 직소(直疏)제도에 주목하였습니다.

유교에 기반한 민본·인정 사상의 전파-피지배층의 전유-요구의 전달장치, 이상 세 가지 구도가 조선후기 민중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던 ‘정치문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민중운동은 세 가지 정치문화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치문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민란 등의 직접적 행동을 일으켰습니다(이 때도 인정 이념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상의 논의는 19세기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전체에 걸쳐 독자적이면서도 보편적 관점으로 시대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사항

1) 19세기 이후 직소의 감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자는 정치문화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치로서 직소를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조선의 직소 문화는 일본,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했으나, 정조대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소통의 폐색(閉塞)이 민란의 한 원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소의 감소에 관해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직소의 비중과 관련해서 주로 한상권의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는 정조대와 19세기 국왕들의 직소를 분석하였습니다. 문제는 18세기의 국왕들 숙종~영조까지의 직소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조의 직소 빈도만을 가지고 19세기 이후 직소가 줄어들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정조는 매우 왕성한 정치활동을 수행했던 특징적 인물입니다. 직소의 수납 뿐 아니라 심리, 도서 편찬, 경연, 친림 의례, 과거 시행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 왕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한가지 고려할 점은 직소는 행위는 국왕의 행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차의 빈도와 직소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국왕의 행차는 국왕이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직소만으로 민중들의 국가와의 소통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또 18세기부터의 직소 추세를 확인해야 19세기에 직소가 폐색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중들의 소원(訴願) 장치가 정치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때, 굳이 분류하면 직소는 국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층 영역의 소원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층 단위에서는 소지(所志), 등장(等狀) 등 지방수령을 대상으로 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했습니다. 산송(山訟) 등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19세기에 들어 소송이 더 많아졌고, 참여 계층도 하층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소송이 다 신속히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통의 통로로 본다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장치들이 있다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자께서는 하부단위의 訴願 장치도 19세기에 마비되었다고 보시는지요?

2) 향중공론과 인정(仁政)의 관계

저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정치문화 중 하나는 ‘향중공론’입니다. 조선후기 총액제가 정착되면서 공동납의 관행이 정착되었고 이에 따라 면리 단위의 공의(公議)가 활성화 되었다는 점, 그리고 공의 주체로서 평천민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점을 논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다만 향중공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저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민본과 인정이 작동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향중공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부담 등에 대한 공동대응입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은 국가(혹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입니다. 국가(혹은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의 인정이 개입되어 있는지 불분명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응세 과정에서도 유교적 덕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민본·인정과 향중공론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 민본과 인정의 붕괴 원인

위의 문제와 연결하여 조선이 민본과 인정을 표방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수 지배층에게 내면화된 것 역시 명확합니다. 다만 약간 무리하게 뒤집어본다면 결국 민본과 인정도 지배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읽힙니다. 조선 전기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수탈적 징세는 19세기에 들어와 극심해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영역에서, 납세를 합리화하고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민본이라는 수사(Rhetoric)를 동원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존의 연구와 저자께서 묘사한 19세기의 상황을 보면, 민본과 인정은 정치적 문란을 제어할만한 강제성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토론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저서를 읽으면서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도 보편적 연구를 수행한 저자의 고심과 노력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의 연구는 관습적 연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하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에 고민을 하게 만드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근대’와 ‘민중’을 생각하며 :
배항섭, 『19세기 민중운동과 정치문화 - 서구중심적·근대중심적 이해의 너머』
(경인문화사, 2025)

남 기 현(한국방송통신대)

1. 들어가며

먼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600쪽에 이르는 배항섭 선생님의 저서는 한 연구자가 30년 가까이 품어 온 문제의식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 스스로 책 머리에서 밝히고 있듯, 1994년 동학농민군의 토지개혁 구상을 ‘근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규정 한 글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은, 서구중심주의·근대중심주의 비판이라는 인식론적 작업을 거쳐, 19세기 민중운동에 대한 역사상으로 구현되었다.

서구중심주의·근대중심주의 비판은 한국 역사학계에서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 다만 그것을 실제 사료와 사례를 통해 일관된 역사상으로 제시한 연구는 드물었다. 조선의 지향점, 19세기 민란, 동학농민전쟁을 거쳐 오늘날의 불평등 문제까지 고려하는, 수백 년의 시간을 하나의 문제의 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 다루어야 할 논쟁의 폭도 넓다. 저자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제시하였다.

토론문에 적은 질문들은 저자가 그리는 큰 그림 속에서 저자의 설명을 더 듣고 싶은 내용을 적은 것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을 따라가며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한 질문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지배 이념의 전유, 정치문화, ‘민중공론’의 규정과 내용이였다. 이 부분은 저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개척한 영역이며, 토론자가 많은 배움을 얻은 대목이다. 다만 질문은 토론자의 전공 분야에 맞추어서 제8장의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익숙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것이 저자와의 토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책의 구성과 논지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모두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4장은 19세기 민중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조선의 지배 이념과 정치문화가 형성, 확산, 변용되는 과정을 다룬다. 저자는 조선왕조의 지배 이념을 민본(民本)과 인정(仁政)으로 규정하였다(제1장). 신문고·격쟁·상언으로 이어지는 직소(直訴) 제도(제2장), 향교·서당을 통한 평민, 천민의 교육 경험(제3장), 사족의 퇴조와 평민과 천민의 지위 상승이라는 향촌의 변동(제4장)을 통해 민본·인정 이념이 민중에게 확산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민중이 지배층의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전유하는 과정이었다. 지배 이념의 확산은 지배층이 기대한

헤게모니의 효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민중이 바로 그 이념을 근거로 지배층의 책임을 묻고 ‘인정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제5~9장은 앞선 장에서 언급한 내용에 기반하여 형성된 정치 문화를 토대로 민중이 ‘아래로부터’ 만들어 간 새로운 공론과 질서, 그리고 그 가능성을 다루었다. 제5장은 18세기 이래 총액제, 공동납이 시행되면서 면·리 단위의 부세 논의가 활성화되고, 사족 중심의 ‘향중공론’과 구별되는, 반상의 차별 없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중공론’과 ‘민회’가 나타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제6장은 19세기 민란을 민본·인정의 정치문화 속에서 읽어 내며, ‘난민’이 국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를 벌하고 인정을 회복하는 ‘대집행(代執行)’의 의식을 지녔고, 그 과정에서 이회, 민회, 도회 같은 새로운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갔음을 강조하였다. 제7·8장은 동학농민전쟁을 정점으로 보고, 집강소를 공동납·민회의 전통에서 자라난 ‘협의체’로, 전봉준의 ‘합의법’에 의한 연합정권 구상을 국왕 위상의 ‘상대화’로, ‘평균분작(平均分作)’을 왕토사상에 입각한 사적 소유의 부정으로 해석했다. 제9장과 결론은 이렇게 아래로부터 형성된 대안적 체제 구상이 사적 소유권의 절대성을 수용한 개화파의 ‘근대적 개혁’에 의해 억압되었음을 논하고, 이를 오늘날의 불평등 문제와 연결했다.

이 책의 핵심 명제는 19세기 민중운동의 지향을 ‘근대’도 ‘반근대’도 아닌 ‘비근대(非近代)’로 파악하는 데 있다. 저자에 따르면 그것은 서구의 경험을 기준으로 한 ‘봉건제-근대’라는 단선적 발전 도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조선의 중앙집권체제와 민본·인정 정치문화 속에서 형성된 독자적인 역사적 가능성이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개별 장의 논의를 넘어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제1~4장은 민중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제5~9장은 그 토대 위에서 민중이 어떠한 공론과 질서를 만들어 갔는지를 보여 준다. ‘지배 이념의 전유 → 민중공론의 형성 → 새로운 질서의 모색 → 근대에 의한 좌절’이라는 큰 흐름으로 책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3. 학문적 의의

토론자가 생각하는 이 책이 가지는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중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다(경제결정론적 민중사에서 정치문화론적 민중사로의 전환). 19세기 민중운동 연구는 대체로 지주제의 모순이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민중 의식과 운동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설명해 왔다. 민중의 생각과 행동은 경제적 조건의 ‘반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저자는 민중 의식을 사회경제적 조건의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민중이 지배층의 언어와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현실에 맞게 해석하며, 때로는 지배층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민중운동을 ‘반봉건’, ‘근대지향’이라는 결론으로 수렴시켜 온 기존 연구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방대한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둘째, 민란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점이다. 기존 연구가 민란과 동학을 ‘봉건 질서의 해체’나 ‘근대 민족운동의 선구’의 틀에서 설명해 온 데 비해, 저자는 민란을 정치 ‘바깥’의 무질서한 소요가 아니라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로 해석하였다. 격쟁, 상언, 등소, 민란을 ‘인정을 회복하라’는 요구의 연속된 방식으로 파악하고, 민란의 ‘난민’을 인정의 ‘대집행’ 주체로 읽어 낸 것이다.

셋째, ‘민중공론’이라는 개념의 발굴이다. 조선의 공론 정치가 사람·사족 중심으로 전개되고 평민과 천민은 공식 공론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총액제와 공동납이라는 재정제도의 변화가 면·리 단위의 일상적 협의 구조를 낳고, 그 안에서 신분 차별을 넘어선 새로운 공론 형성의 관행이 자리 잡았다는 분석하였다. ‘향중공론’에서 ‘민중공론’으로, 다시 민란기의 ‘민회’와 동학기의 ‘집강소’로 이어지는 계보를 그려 낸 것은 이 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이었다.

넷째, 민중사의 ‘현재성’ 회복이다. 저자는 민중사 연구의 위기를,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현재성을 재정립하지 못한 데서 찾는다. ‘근대’가 만들어 낸 최선의 성취로 여겨지던 민주주의마저 위기에 처하고 불평등, 생태 위기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전근대·비근대의 경험을 청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양으로 재발견하려고 하였다.

다섯째, 비교사·동아시아적 시야의 동원이다. 서양, 동양의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해외 학자들의 근대 비판을 폭넓게 끌어와서 한국사의 의미를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서구와 동일한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조선의 ‘가능성’을 보편적 물음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

4. 몇 가지 질문들

1) ‘배타적 소유’와 ‘배타적 소유권’

이 책의 토대를 이루는 것 중 하나는 “조선에서는 근대적 정치·경제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이미 사실상의 배타적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라는 주장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근거는 환퇴(還退) 관습의 변화다. 매매를 무를 수 있는 기한이 점차 정리되었고, 그 과정이 매도인보다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선 사회에 일찍부터 배타적 재산권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환매 기한이 수십 년에서 100년에 이르던 중국·일본과의 비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된다.

다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배타적 소유’와 ‘배타적 소유권’을 어떤 층위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토론자가 이해하기에 ‘배타적 소유’는 특정 개인이 토지를 사실상 처분·수익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배타적 소유권’은 그 배타성이 국가의 보장과 제3자 대항력을 갖춘 권리로 제도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환퇴 기한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퇴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었으며, 환매조건부 매매는 조선 후기에도 중요한 담보·신용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환퇴 관습이 법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일제시기 일본 민법의 적용과 조선고등법원 판례가 확정되면서부터라고 생각된다. 공증된 공적 장부 대신 백문기(白文記)나 구문기 전달 관행이 널리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을 수 있다.

농민군이 주장한 평균분작에 관해서도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다. 저자께서는 평균분작을 사적 소유의 부정으로 보셨고,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조선 사회에 서구 봉건제와 같은 상급소유, 하급소유의 중층적 권리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이해가 되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도지권과 같은 사례는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도지권은 단순한 임차권이 아니라 매매·상속·증여가 가능한 권리였으며, 지주의 소유권과 별도로 경작자의 권리가 일정하게 존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근대 이전에 확립된 배타성’은 관습과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사실상의 배타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보장과 제3자 대항력을 갖춘 법적 소유권

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 도지권과 같은 권리의 존재를 고려할 때, 조선 사회에 중층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2) 평균분작과 실현 가능성

두 번째 질문은 앞선 질문과 연결된다. 저자는 ‘평균분작’을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상으로 해석한다. 전봉준이 토지 소유의 불균등을 “사람을 매매하여 귀천이 있게”하는 것에 비유하며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인식하였고, 활빈당과 진보회가 “왕토가 사전(私田)이 되었다”라고 비판한 사실은 이러한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평균분작이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가진 구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책에서 평균분작은 일관되게 농민군의 ‘구상’으로 제시되지만, 그것이 집강소나 특정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확인되는 사례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현 여부보다 가능성이 아래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토론자가 궁금한 것은 ‘평균분작’을 실현을 전제로 한 체제 구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왕토사상을 전제로 한 도덕적·이념적 지향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는 점이다. 혹시 평균분작이 실제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대안적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서 고려해야 할지 여쭙고 싶다.

3) 왕토사상의 양면성

저자는 동학농민군의 평균분작을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입각한 사적 소유의 부정’으로 읽고, 왕토에 입각한 토지개혁론이 조선 건국기의 조준에서 실학자, 19세기 관료, 활빈당과 진보회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었다.

다만 토론자는 이 대목을 읽으며 왕토사상이 지닌 또 다른 측면에 대해 궁금해졌다. 왕토사상은 본래 천하의 토지는 모두 왕의 것이라는 관념에 기반한 만큼, 평균 분배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국가의 토지 지배와 수취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공토 운영은 이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내장원은 역토, 둔토, 공장토 등을 공토(公土)로 분류하고 도세(賭稅)를 부과하면서 공토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작인들은 도세와 결세를 함께 부담하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자신들이 개간하거나 매매를 통해 점유해 온 토지를 사토(私土)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장원은 이미 사검과 사정을 거쳐 확정된 공토라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가 왕토사상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1900년대 초 공토 운영 과정에서 내장원이 작인의 경작 관행이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했던 모습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제국의 공토정책과 동학농민군의 평균분작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같은 왕토사상이 한편에서는 평균 분배의 논리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토지 지배와 수취 확대의 논리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하다. 왕토사상이 민중적·대안적 가능성의 원천이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동시에 국가 권력의 토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기능할 수 있었다면 그 양면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대가 아래로부터의 가능성을 억압하였다’는 구도 속에서, 왕토사상을 활용하여 농민을 압박했던 왕조

국가의 위치는 어디에 놓아야 할지 여쭙고 싶다.

4) 비근대와 근대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근대를 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근대를 척도로 삼지 말자’는 것이다. 이 점이 조경달의 ‘반근대론’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반근대가 이미 도래한 근대적 충격에 대한 반작용이라면, 저자가 언급한 ‘비근대’는 그러한 충격이 본격화되기 이전 열린 가능성을 가리킨다. 토론자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비근대’를 통해 근대 자체를 성찰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저자는 비근대의 성립 근거로 1894년 당시에는 아직 본원적 축적이나 본격적인 근대적 충격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항 이후 미곡의 일본 수출 확대와 지주 경영의 변화, 대한제국기 토지정책의 전개를 함께 고려한다면, 이미 일정한 변화와 충격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한편, 저자는 동학농민군의 체제 구상을 오늘의 불평등과 생태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으로 읽어 내고, 그러한 가능성이 개화파의 근대적 개혁으로 억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서사가 결국 ‘근대’와의 관계 속에서 민중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근대를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다.

5) 민중은 누구인가

이 책의 주인공, 그리고 가장 핵심은 ‘민중’이다. 저자는 1980년대 변혁주체론이 상정한 민중상, ‘진보와 해방으로서의 근대를 만들어 가는 목적의식적 변혁주체’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민중을 권력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편되는 유동적 존재라고 보았다. 상황에 따라 저항하기도 하고 지배에 가담하기도 하는 존재로 설명한다. 저자가 언급한 민중, 그리고 그 모습에 많은 공감이 되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저자가 제시하는 민중의 모습과 기존 변혁주체론에서 언급한 민중의 모습이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책의 민중 역시 민중공론과 민회, 집강소를 만들어 가는 능동적 주체로 그려진다는 점에서는 기존 변혁주체론의 민중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민중은 기존 변혁주체론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민중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 지향만 달라진 것인지 궁금하다.

또 한 가지는 ‘민중의 다성성’ 문제이다. 저자는 민중 내부의 갈등과 균열, 그리고 민중이 때로는 권력에 가담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론에서 민중은 대체로 민본·인정의 회복과 평균분작이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집합적 주체로 나타난다. 저자는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을 ‘아래로부터 형성된 민중이 배제된’ 위로부터의 기획으로 평가한다. 다만 만민공동회에는 시전상인, 학생, 백정 등 다양한 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대표적인 정치 참여의 경험으로 이해해 왔다.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민중은 저자가 설명하는 ‘민중’의 범주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5. 나오며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질문들이 저자의 문제의식과 의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이 책은 근대, 민중, 소유, 정치 문화와 같은 개념들을 생각하게 한다.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민중의 정치 문화와 민중공론, 집강소와 평균분작을 하나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연결하여 읽어 낸 시도 깊게 논의될 만한 중요한 성과이다. 19세기 민중운동 연구가 민중이 실제로 사용한 언어와 논리, 형성한 공론과 질서를 더욱 세밀하게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생각할 기회를 주신 저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MEMO

MEMO

2026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총괄: 김양식(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기획: 이병규(연구조사부장)

진행: 서고운(연구조사부)

지원: 김미연(연구조사부)

인쇄: 2026년 6월 9일

발행: 2026년 6월 11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누리집: www.1894.or.kr

전 화: 063-530-9438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6

<비매품>